

내년도 안전 예산 대폭 증액 - 재난 예방·대응에 중점

박 경 남 | 건설경제 기자

세 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등 끊이지 않고 있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년도 안전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도 안전 예산은 올해(12조 4,000억원)보다 17.9% 증가한 14조 6,000억원으로 전 분야를 통틀어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안전 예산은 어디에 얼마나 쓰일까.

우선 직접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투자된다. SOC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 도로, 노후 철도·교량 등 재해시설 기능 강화에 3조 3,00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올해(2조 6,000억원)보다 29.3% 늘어난 것으로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기능을 조기에 보강하

기 위한 것이다.

현재 예비비 197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시설물 정밀 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 SOC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올해(4,800억원)보다 10.4% 늘어난 5,297억원이 배정됐고 재해위험 지역 정비에 올해(3,524억원) 대비 8.3% 증가한 3,816억원이 투입된다. 항만 유지보수와 국가어항관리 예산은 각각 1,608억원, 207억원으로 올해(1,468억원·126억원)보다 9.5%, 64.3% 늘어났다.

선형 불량 위험 도로, 노후 교량·터널 등 도로 투자도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 3,000억원으로 62.5% 확대된다.

특히, 연장 500m에서 1km인 중규모 터널에 대한 안전 기준을 1km 이상인 대규모 터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올해 891억원이었던 교

특집 '건설 안전', 생명 중시의 기술 경쟁력

량 보수 잔여 물량 해소 예산도 2,597억원으로 200%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보강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아직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90개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해 스크린도어 사각지대를 없애고 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 보강 지원에도 902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철도선로와 교량 개선에도 올해(6,000억원)보다 50.0% 증가한 9,000억원이 책정됐다.

항만, 댐 등 재해 예방 시설의 내년도 구축·관리 예산도 7,000억원으로 올해(6,000억원)보다 4.7% 확대됐다.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해 소화전 정비 예산을 올해(2,094억원)보다 9.8% 늘려 2,300억원을 지원하고 국가어항 구축·관리에도 올해(1,710억원)보다 20.5% 증가한 2,061억원을 투입한다.

첨단 안전 기술과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6,000억원으로 올해(5,000억원)에 비해 15.6% 증액했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건설 기술 개발에는 신규로 42억원이 투자된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가 큰 지역에 국민안전기념관을 건립하고 해양안전체험관도 신축해 안전 체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에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으로 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안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도 손질한다. 오는 201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 관련 설비 투자 등에 나서는 기업에 대출과 직접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과 중견기업이 안전 설비에 투자할 경우 1회 최대 150억원, 총 2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도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

노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민간 투자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RTL(Rehabilitate Transfer Lease)과 RTO(Rehabilitate Transfer Operate)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안전 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는 내년도 안전 예산 수립에 앞서 체계적인 안전 예산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동안 안전 예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지출 분류에 따라 12대 분야의 하나로 '공공 질서 및 안전' 예산에 반영, 분류됐다.

그러나 '공공 질서 및 안전' 예산은 경찰, 해경, 법원, 방재청 등 치안 및 안전 담당 기관의 예산 합계로 구성돼 국토부, 해수부 등 다른 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이 누락되는 등 실질적인 안전 예산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안전 예산의 세부 분류 부재로 안전 대책의 투자 방향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지 못했고 투자 우선순위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안전 예산 분류 체계를 확정했다. 우선, 안전 예산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활동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하고 사업 목적과 기능 등에 따라 협의의 안전 예산(S1)과 광의의 안전 예산(S2)으로 구분했다.

S1에는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해 재

난 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담은 한편, S2에는 S1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 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 예산 사업을 성질별로 △안전 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 R&D, △안전 시스템 지원·보완, △재해 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 7가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 중 안전 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등이 S1에 속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S1은 5조 3,000억원, S2는 12조 4,000억원이다. 안전 예산의 새로운 개념 설정과 포괄 범위별 분류로 투자 방향 설정 등 안전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전 예산 - SOC 예산과 다르다

정부가 내년도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나서면서 안전 예산이 SOC의 신규 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안전 확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안전 예산 사업목록에 SOC 예산을 슬며시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담 관련 예산이 올해 3,198억 6,000만원에서 내년도 3,833억 7,600만원으로 19.9% 증가했고 도로 유지보수 예산도 올해 3,370억 4,200만원에서 내년도 4,775억 7,400만원으로 41.7% 늘어났다는 게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 예산 범위에 올해(3,140억 4,200만원)보다 44.8% 늘어난 4,54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로 건설비가 포함되었다며 안전 예산이 곧 SOC 예산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 예산은 그 내용면에서 SOC 예산과는 큰 차이를 드러낸다. 안전 예산은 대부분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 안전에 투입된다. 노후 교량·터널 보강과 노후 선로 및 선형 불량 도로 개선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보수·보강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 내년도 SOC 예산에 반영된 사업 목록을 보면 원주~강릉 철도 건설(9,200억원), 국도 6호선·59호선(2,316억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1,416억원), 제2영동민자고속도로(605억원) 등 신규 사업과 용산~문산 복선 전철,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 구간, 성산~담양 고속도로 등 계속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안전 예산은 수리시설 개보수(5,297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3,816억원), 소화천 정비(2,300억원), 향만시설 유지보수(1,608억원) 등 보수·보강이 주를 이루고 있다.

SOC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안전 예산은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재난 대응·복구, 국민 실생활 안전 위험 요인 예방,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투자된다. 학교시설 등 국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가 대표적이다.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은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6,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노후 저수지 등 시설물 점검 후 보수·보강에 올해(1조 4,000억원)보다 42.9% 늘어난 2조원이 지원된다.

또한 싱크홀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에 42억원, 선원비상훈련장 조성에 35억원, 해양안전 체험과 신축에 13억원 등이 투입된다. CERIK